

5·18망언에 들불처럼 타오른 금남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망언'에 반발한 광주 민심이 들불처럼 타올랐다.

'자유한국당 5·18망언 의원 3인 퇴출과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법시민주동본부'는 16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법시민주동본부를 열었다.

대회에는 시민과 각계각층 인사 1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대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회사, 주제발언, 공연, 퍼포먼스 시민 결의,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 ▲공식 사죄 ▲5·18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 제정 ▲역사 왜곡 민간 공동대응·강력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5·18 진상조사 위원 협조 등을 촉구했다.

한국당 사죄·해산의 뜻을 담은 퍼켓을 든 참가자들은 "망언 의원 사퇴하라" "5·18 왜곡·폄훼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수없이 외쳤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국가폭력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한 시민을 모욕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징계 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해체, 망언의원 퇴출, 지만원 구속, 학살자 집무환 처단'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망언 국회의원 퇴출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도 다졌다.

학생·장애·청년·여성·노동·종교계 대표들은 '5·18 당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행위와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주제발언을 통해 "5·18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과 지만원은 나라의 모든 법률·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이자 반국가 집단"이라며 "역사 왜곡 세력의 그릇된 행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당은 스스로 망언 국회의원의 제명에 나서고 역사관이 검증된 5·18 진상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 이를 못하면, 추천 자체를 포기하라. 국회는 5·18 왜곡 저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5월 자행했던 총칼의 화살이 망언의 화

역사 왜곡 처벌 광주 범시민결기대회 1만명 운집 규탄 발언·퍼포먼스 등 '왜곡 근절' 결의 다져

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5·18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원회는 세 의원을 하루빨리 제명 조치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5·18이 왜곡·폄훼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책임을 묻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수사·사법기관도 공

정·엄정한 수사와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갑석·윤민호 더불어민주당·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 장병안·윤소하 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역사 왜곡을 뿌리뽑겠다. 국민이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5·18 당시 신군부 발표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과 영화 택

시운전자 주인공인 김사복씨의 아들도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금남공원까지 오가는 행진을 끝으로 '역사 왜곡 근절 결의'를 모았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지난 8일 연정터리 5·18 공청회에서 각종 망언을 쏟아내고 허위 주장으로 판명난 북한군 5·18 광주 투입설을 유포,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는 보수단체 4곳이 광주 금남로 4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최남규 기자



정월대보름 부럼 준비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부럼(땅콩, 호두, 잣)을 구매하고 있다.

'유신잔재 특혜 논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되나

광주시의회가 유신잔재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 심의를 오는 19일로 연기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는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광주시의회도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새마을회원들의 반발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연기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 행자위는 13일 오전 의원총회까지 열어 놓고도 새마을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조례안 심의를 포기하고 19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연주·김광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시민사회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유신적폐로 지목하고 폐기를 요구하자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즉시 폐지 판정을 했고, 광주시도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회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새마을장학금의 문제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발의되고 새마을위원들의 반발이 일자 1차 검증 단계에서 행자위가 심의를 망설이고 있다.

행자위 일부 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새마을회원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행자위원은 새마을회원들이

대체 입법을 요구하자 빚고을장학금을 통해 새마을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심의에서 행자위가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본회의를 거쳐 최종 폐지된다.

하지만 조례안을 부결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이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심의를 보류할 경우에도 의정이 심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

김익주 행자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다"며 "(특정단체의)압력이나 폐법으로 의회가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농산물 창고서 태국인 트럭 갈려 숨져

17일 오전 8시14분께 진도군 임회면 농산물 창고 앞에서 태국인 A(38)씨가 논두렁으로 밀린 트럭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이날 배추 저장 작업 직전 트럭을 창고 밖으로 이동 정차했으며, 작업장반이 몰던 다른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배터리를 연결해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12월 입국했으며, 각자 생업에 충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해둔 트럭이 완만한 경사에서 갑자기 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출생 허위서류 작성 지시' 브로커 검거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고국에 보내기 위해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서는 15일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성을 모집한 혐의(공전자기록 부실 기재 등)로 A(47)씨와 보증을 선 B(3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C(28·여)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C씨의 출생신고 서류가 구청에 접수 될 수 있도록 인우보증을 선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총책 D(50)씨의 의뢰를 받고 '고수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고 B씨 등은 A씨에게 연락했으며 허위 출생신고 인우보증을 선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공사례금으로 D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내 폭행 뒤 잠적한 60대 한 달 만에 검거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났던 60대 남편이 잠적한 지 한 달만에 의식을 잃은 채 야산에서 발견됐다.

고흥경찰서는 15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63)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30분께 고흥군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 B(49·여)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트럭을 이용해 달아났으며 인근 해상으로 돌진했다.

사고 직후 나무에 걸린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또다시 도주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헬기와 경력을 투입,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한 달 기량 숨어지내던 A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자신의 집 인근 야산 대나무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합원에 금품 농협 조합장 부부 체포

검찰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부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15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자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A 씨의 부인 B 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총 360만 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인원, 구체적 액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